

IFES

뉴스레터

2024년 11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26호(11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 연구활동	07
3. IFES 포럼	10
4. Fellowship 사업	11
5. 한반도 정세 동향	12
6. IFES 북한 지식 정보	22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4
2. 언론 속의 IFES	25
3. IFES 도서관	27
4. 예정사항	29
5. 안내사항	30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 연구활동

IFES 포럼

Fellowship 사업

한반도 정세 동향

IFES 북한 지식 정보



1. 학술활동

가. 제11차 삼청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월 8일(화) 19:00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이 “K-방산 vs. NK-방산: 국제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포럼에서 양욱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최근의 국제적 갈등의 심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 증강, 핵무기 개발, 그리고 북한판 ‘핵 3축’ 구축 등이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 전략이 국제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며, 북한의 방산 산업이 김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태세 강화와 재래전 역량의 현대화 등 한반도에서의 미래 군사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K-방산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번 포럼은 국제분쟁이 한반도 안보와 방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남북한 방산 산업의 차이와 그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원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 발표내용 요지 >

1. 남북한 방산 경쟁과 국제분쟁 관련

○ 북한의 무기 수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판매하며 실질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군사력 적용이 확대되었음.
- 이 과정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자체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음.

○ K-방산과 NK-방산의 차이점

-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며, 국제적 신뢰를 쌓고 있음.
- 반면, 북한의 경우 무기 수출이 국제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상품성 있는 공산품인 무기 체계를 일부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2. 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핵위협 문제

○ ‘핵무력 정책법’과 ‘전술핵’ 개발의 의미

- 북한은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전쟁 억제를 목표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핵 선제 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함.
- 이 법안은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통해 한반도 내 갈등이 고조될 시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

- 북한은 최근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을 개발하여 발사 속도와 이동성을 대폭 향상했으며,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여 방어 체계 회피 능력을 갖추고자 함.

3. 북한의 국제분쟁 개입과 사례 설명

○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 북한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고문을 파견하고 무기 체계 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참전 경험을 쌓고 있음.

- 북한은 실제 전장에서 전술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북한 내 군사력 증강에 활용하고 있음.

○ 북한의 과거 중동 분쟁 개입 사례

- 북한은 1973년 4차 중동 전쟁(옴키푸르 전쟁 / Yom Kippur War)에서도 이집트와 시리아에 군사 교관단을 파견하여 전투를 지원한 바 있음.
- 이는 북한이 국제분쟁에 개입하며, 전쟁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4. 한미일 안보 협력과 K-방산의 국제적 역할 문제

○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 분야에서도 큰 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함.
- 특히,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의 군사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K-방산의 국제적 역할 확대

- 한국은 첨단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와 방산 협력을 진행 중이며, 특히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에 무기 수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이는 한국이 국제분쟁 상황에서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5.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안보 위협 관련

○ 북한의 경제 위기 심화

-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무기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의존하고 있음.
- 이는 북한 내부에서 비축해야 할 자원을 외부로 유출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북한의 내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전시 물자 판매로 인한 리스크

- 북한은 전시 비축 물자를 러시아 등에 판매하면서 자체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안보 체계가 더 취약해질 수 있음.
- 이러한 단기적 수익 창출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군사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1. 학술활동

나. 단국대 부설 몽골연구소 방문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월 29일(화) 10:00 단국대 부설 몽골연구소 회의실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동 간담회에는 송병구 몽골연구소장, 강준영 몽골연구소 수석연구원, 오미영 단국대 교수,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 미야모토 사토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극동문제연구소는 현재 북한의 두 국가론 프레임하에서 북한과 관계가 긴밀한 몽골을 통해 북한 및 동북아시아 연구의 지평 확대 추진을 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그간의 학문적 성과에 기반하여 몽골과의 연구교류 사업을 추진코자 모임을 가졌다. 몽골연구소측은 초기 언어주위 연구에서 역사, 문화 분야를 거쳐 현재는 경제, 정치 외교 등 몽골 관련 지역학으로 연구 분야를 확산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협력시 연구대상 분야의 다양화와 연구내용 심화 및 정책적 타당성 제고 등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표하였다.

양 기관은 상호간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몽골 연구의 노하우와 각종 자료, 네트워크 등을 공유하는 한편, 세미나 및 학술사업의 공동 진행 등 다각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추후 양 기관은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좀 더 구체적인 학술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 2024.10.29. 단국대 부설 몽골연구소 회의장면 >

2. 교수 연구활동

가.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 북한의 이해』

(공동 집필 도서 출간 <박영사 2024. 10. 8.>, CHAPTER 02. 헌법과 통치구조: 북한에도 헌법이 있나요? 게재 주요내용 요약: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주요내용 요약»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헌법 개정은 ‘법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대에 선대 지도자들과는 다른 강도로 사회주의 법치와 법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당-국가 시스템의 관리체계와 능력을 현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 김정은 시대 헌법은 사회주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체제의 주요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이데올로기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며, 경제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및 안정과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 북한은 헌법에 근거한 법치 및 법건설을 위해 간부들과 인민들 모두 법률 의식과 관념을 제고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래 세대들에 대한 법제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종합해보면, 김정은 시대 헌법의 특징은 당-국가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현대화하고, 기존 당의 정책과 노선으로 대변되었던 최고지도자의 지시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법제화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이 정치 및 법률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당이 우선적으로 법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 학술활동

임출 교수

- 1) 美조지워싱턴대-KDI공공정책대학원 공동주최, 제6회 NKEF 연차학술대회 발표
 - 일자/장소: 2024. 10. 8. (화) / 美워싱턴DC 조지워싱턴 대학
 - 내용: 북한의 국내 경제 발전과 20x10 정책 (North Korea's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20x10 Policy)

2. 교수 연구활동

조진구 교수

- 1)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주관 학술 세미나 발표
- 2024. 10. 25. (금)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내용: “일본인 납치 문제의 현황과 피해가족에 대한 구제”

김상범 교수

-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
- 2024. 10. 7. (월) /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
- 내용: 하노이 이후 남북교류 중단 6년: 남북협력 민간단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한중 1.5트랙’ 회의(1세션) 참석 토론
- 일자/장소: 2024. 10. 17. (목) ~ 18. (금) / 중국 북경
- 내용: 북한 핵 문제 등 중국 외교에 거는 기대
- 2) 경남대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특강
- 일자/장소: 2024. 10. 24. (목) / 경남대 창조관
- 내용: “미국 대선과 우리 외교” 주제로 미국 대선 동향, 양 후보자의 외교, 경제 정책 설명, 우리의 대응 자세에 대한 이해 확산
- 3) 한일 비전 포럼 참석 발표
- 일자/장소: 2024. 10. 28. (월) / 롯데호텔
- 내용: 美대선 이후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미국에서도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기에 안보 경제 안정을 위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4) 한미동맹 포럼 참석 발표
- 일자/장소: 2024. 10. 30. (수) / 조선포텔
- 내용: 북-러 관계 등을 고려, 핵협의 그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한국외교협회 주관 세미나 발표
- 일자/장소: 2024. 10. 8.(화) / 한국외교협회 회의실
- 내용: “2024 미국 대선과 한국”

다.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 1) YTN '뉴스퀘어10' 출연 (2024. 10. 4. 금)
- 내용: 김정은 "윤, 온전치 못한 사람"...맹비난 의도는?
- 2) MBC '통일전망대' 출연 (2024. 10. 5. 토)
- 내용: 남한과 단절 가속하는 北, 헌법 개정해 '통일'까지 삭제 예상
- 3) YTN '뉴스퀘어10' 출연 (2024. 10. 14. 월)
- 내용: 북한 "전방 사격 준비태세"...무력 도발 가능성은?
- 4) YTN '이슈플러스' 출연 (2024. 10. 15. 화)
- 내용: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의도는?
- 5) 연합뉴스 '1번지이슈' 출연 (2024. 10. 16. 수)
- 내용: 결국 끊어진 남북 육로...북, 대남 위협 다음 행보는?
- 6) SBS '용감한 토크쇼 '직설'' 출연 (2024. 10. 17. 목)
- 내용: 남북 연결도로 폭파한 북한...미 대선 앞두고 추가 도발할까
- 7) YTN '뉴스퀘어10' 출연 (2024. 10. 23. 수)
- 내용: 북한군 파병 근거 또 공개...북 "근거없는 소문"
- 8) YTN '뉴스ON' 출연 (2024. 10. 29. 화)
- 내용: "김정은 암살 대비 경호 격상...장교 휴대전화 금지"
- 9)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출연 (2024. 10. 30. 화)
- 내용: 북한 내부 동요 커졌나?...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강화

조진구 교수

- 1) KBS1 '남북의 창[이슈&한반도]' 인터뷰 (2024. 10. 5. 토)
- 내용: 괴물 미사일 첫 공개 ...전략사의 역할은?
- 2) 국방일보 기고 (2024. 10. 21. 월)
- 내용: 러·북 밀착에 따른 한반도 정세는?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코리아 타임스 기고 (2024. 10. 16. 수)
- 내용: "Defense Innovation: what is to be done?"(국방 혁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2)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2024. 10. 28. 월)
- 내용: "북한 파병, 모든 노력 필요한 안보 위기"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내일신문 기고 (2024. 10. 14. 월)
- 내용: "트럼프의 미국, 해리스의 미국"
- 2) YTN '뉴스나우' 출연 (2024. 10. 18. 금)
- 내용: "다급해진 해리스 '네거티브 공세'...표심 영향은?"

3. IFES 포럼

IFES 포럼(요약)

미국 대선과 한국의 국익

(2024. 10. 14.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코 앞으로 다가온 美대통령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미국의 대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전과 기회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대선 후보별로 한반도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견지해야 할 외교정책의 원칙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해리스의 한반도 정책 전망: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간 군사협력을 통한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현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초를 견지할 것이다. 다만, 해리스가 한미일 3국간 군사동맹을 추진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결국, 해리스 후보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가 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 전망: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북미 직접협상 방식으로 북한 핵 능력의 동결이나 감축 등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 등을 카드로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요구할 것이며, 이는 한미간 갈등을 높일 것임.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부상할 수도 있음. 아울러,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형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유동적인 국제 정세 하에서 한반도에서의 굳건히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의 국익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힘을 통한 안보 전략과 함께 평화전략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립전략은 북한의 피포위 의식을 강화시켜 핵 무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비핵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간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간 통신선을 복원하고 상호 신뢰 조성을 위해 남북간 경제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중국 및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 척을 지는 것은 동북아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도의 외교처럼 균형 외교를 펼쳐 나가는 것을 제언한다. 끝으로, 가치 외교에 기반하여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올인하기 보다 한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에 놓고 유연하게 대외협력을 추진하는 실용 외교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한다.

4. Fellowship 사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펠로 6명(中판 빈빈, 中리아오 무춘, 美김연희, 中양향봉, 日호리야마 아키코, 日미야모토 사토루)을 대상으로 10월중 연구자 최종 발표회와 수료식 등을 실시했다.

가. 펠로 수료식

- 일시/장소: 2024. 10. 7.(월) 11:30, 10. 23.(수) 14:00 / 평화관 1층 대회의실
- 수료자: 펠로 3명(10. 7: 중국 판 빈빈, 중국 리아오 무춘 / 10.23: 미국 김연희)
- 참석자: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상범 주임교수, 실무진
- 주요내용: 이관세 소장은 6개월 동안 통일 북한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한 것에 대해 격려하며, 향후에도 통일 북한문제 전문가로 많은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



< 판 빈빈 >



< 리아오 무춘 >



< 김연희 >

나. 펠로 최종 발표회

- 일시/장소: 2024. 10. 23.(수) 14:00 / 평화관 1층 대회의실
- 발표자: 펠로 1명(중국 양향봉)
- 참석자: 펠로 2명(일본 호리야마 아키코, 미야모토 사토루),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상범 정재욱 교수, 실무진
- 주요내용: “동아시아 블록 지정학의 부활”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 이후 연구소 교수진들의 다양한 코멘트를 반영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



5. 한반도 정세 동향

가.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9.29. 김여정 부부장 담화,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발표 비난 및 러시아 지지 표명 (9.29. 조선중앙통신)
- 9.30. 김성 유엔주재 상임대표 유엔총회 제79차 회의 연설 (10.7. 외무성 홈페이지)
-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우리의 자위권 …… 흥정하지 않을것”
- 10.1. 국방성 김강일 부상, 예고 없는 美전략자산 전개에 상응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동 계획 검토·실시 가능” 경고 (10.1. 조선중앙통신)
- 10.1. 김정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중국 국경절 75주년 기념 축전 (10.1.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전통적인 북중 친선을 강조하며 친선 협조 관계의 강화발전 의지를 표명
- 10.2. 김정은,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현지시찰, 유사시 “핵무기 포함한 모든 공격력 사용할것 …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 불가능” (10.4.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10.3. 김여정 부부장, “핵보유국앞에서 줄망스러운 처사”, ‘국군의 날’ 현무-5 및 TEL 평가절하 (10.3. 조선중앙통신, 10.4. 로동신문)
- 10.6. 김정은-시진핑, 북중 수교 75주년 기념 축전 교환 (10.6.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새로운 역사적발전단계 …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
- 10.6. 김정은, 평안북도 지방공업공장건설장 및 포병중합군관학교 졸업생 포실탄사격훈련 현지지도 (10.6.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평북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고, 군인건설자들의 현대화·표준화·규격화 성과에 만족 표시, 이를 따라 배우라 지시
- 10.6. 외무성 대변인 성명, “NATO가 러북협력 강화 중상모독” (10.6. 조선중앙통신, 10.7. 로동신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신임 NATO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조장하고 이를 연장’하는 대상으로 북한을 직접 지목(10.5. VOA)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사태의 본질을 외곡하며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사이의 합법적인 협력강화를 중상모독“했다고 반발

- 10.7. 김정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 60주년 축하방문 연설 (10.8.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의식하는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싶지도 않다”고 발언
- 10.8.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 (10.9.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 ▲경공업법·대외경제법 심의채택 ▲품질감독법 집행검열 감독 정형 ▲조직문제 등 의안 상정 및 채택
- 10.9.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국경 영구적으로 차단·봉쇄” 요새화 공사 (10.9. 조선중앙통신)
 - 대한민국과의 영토 분리를 위한 군사적 조치로 10.9.부터 도로·철도 차단 및 요새화 공사 진행 발표
- 10.9. 국방과학원 240mm조종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 (10.9. 조선중앙통신)
- 10.11. 외무성 중대성명 (10.11. 조선중앙통신, 10.12. 노동신문)
 - 외무성은 한국 무인기가 10.3., 10.9., 10.10. 영공을 침범해 평양에 ‘뼈라’를 살포했다고 주장
- 10.13.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 (10.13. 조선중앙통신, 10.14. 노동신문)
 -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10.13. 한국 국방부의 무인기 관련 입장문을 비난하고 “타국의 령공을 침범하는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담보해나서야 한다”고 요구
- 10.13. 국방성 대변인 담화, “무인기에 한국군부세력 가담 판단 … 재발시 선전포고 간주” (10.13. 조선중앙통신, 10.14. 노동신문)
- 10.13. 총참모부 “국경선부근 완전사격준비태세” 작전예비지시 하달, ‘국경선’ 사격대기태세 전환 및 평양 방향공감시초소 증강 (10.13. 조선중앙통신, 10.14. 노동신문)
- 10.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보도 (10.14.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소프트웨어보호법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제품생산허가법 ▲원림록화법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 상정심의·채택
- 10.14.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 (10.14. 조선중앙통신)
 - “우리는 평양무인기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핵 보유국(북한)의 주권이 침해당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
- 10.15.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 무인기 한국군이 보냈다는 명백한 증거 확보 (10.15. 조선중앙통신)

5. 한반도 정세 동향

- 10.15.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보도,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 (10.17.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10.17. 김정은, 제2군단 지휘부 방문, “대한민국은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 (10.18.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주요 발언: ▲대한민국은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 ▲남북도로 폭파는 동족의식·통일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북한 주권 침해 시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 ▲만약이라는 전제조건 하 대남 공격력 사용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행동
- 10.18. 사회안전성 대변인 발표, “한국쓰레기들이 대형비닐봉선으로 살포한 오물들이 또다시 발견” (10.18. 조선중앙통신)
- 10.18. 국방성 대변인 발표, “평양 무인기는 ‘국군의 날’ 무인기와 동일 기종” (10.19.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10.20. 최선희 외무성 담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설립 … 반드시 대가 치르게 될 것 (10.20.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설립(10.16.)을 비난하며 “세계적인 반미련대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것”이라고 주장
- 10.20.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유엔사무총장 한국 군부 규탄해야” (10.19. 조선중앙통신)
 - 유엔사무총장이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에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내정 간섭 발언 전면배격’ 의사 표명
- 10.23. 북한 외무성 부상과 베트남 상임부상 회담, 교류협조 및 친선관계 강화발전 문제 협의 (10.24. 조선중앙통신)
- 10.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 ‘국가법(國歌法)’ 채택 및 중앙재판소 판사 선출 (10.25.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10.27. 국방성 대변인, 무인기 사건 최종조사결과 발표 (10.28.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성은 평양 상공 무인기 사건의 ‘증거자료’로 비행계획 및 비행이력을 수집했다며, 재발 시 원점타격 보복을 경고
- 10.28.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 “서울 상공에 무인기 빠라 살포하면 반응 어떨지 궁금해” (10.28.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미국/일본

-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2026년 8.3% 인상 (YTN, 10.4)**
 - 미국 대선 전 타결... 향후 급격한 인상 막기 위해 연간 증가율 5%로 제한
- **바이든 “핵 위협 감소 위해 北과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돼” (SPN, 10.15)**
 - 바이든 대통령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비핵화 문제를 두고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 **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북핵 보호 대가 제대로 지불 안 해” (뉴스1, 10.16)**
 -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약 13.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될 것. 트럼프는 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상 최악의 협상으로 꼽아.
- **미, 북한군 파병설 우려...새 대북제재 감시체계 MSMT 출범 (KBS, 10.17)**
 - 존 커비(백악관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의미”
- **미 국무부, 러시아 북러조약 비준 착수에 “크게 우려” (YTN 10.17)**
 - 카린 장-피에르(백악관 대변인) “동맹인 한국과 공조를 통해 긴밀히 감시할 것”
- **美 국방 “북한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어” (중앙일보, 10.23)**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
- **일본 제102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오늘 선출...새 내각도 출범 (KBS, 10.1)**
 - “남북 피해자 문제는 우리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임할 것”
- **이시바, 납북자 가족 반대에도 ‘북일 연락사무소 설치’ 의사 전달 (산케이신문, 10.2)**
 - 납북자 가족 모임은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질 경우 북한에 유리한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

중국/러시아

- **10.08. 북중접경 1,400km에 ‘3중 철조망’ 구축 (10.08. 조선일보)**
 - 길이는 남북 군사분계선(248km)의 다섯 배 이상, AI 감시시스템 도입
- **10.15. 러중, 北 한국드론 평양 침투설에 국방 2인자 회동 (10.15. 서울신문)**
 - 중러 양국 군대는 양국의 공동 이익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세계 전략적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

5. 한반도 정세 동향

- 10.23. 푸틴-시진핑 “중국과 러시아의 깊은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 (10.23. 뉴시스)
 - 푸틴-시진핑, 올해 세 번째 만남.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16회 정상회의 계기 단독 정상회담 진행
- 10.24. 중국, 드론 신 방공시스템 공개 (10.24. 한국경제TV)
 - 중국 CCTV는 최근 중국인민해방군 제71집단군 방공부대의 신형 미사일·기관포 시스템 시험 영상 공개
- 10.28. 중국, 대만의 2.8조 규모 미국 무기 구입에 반발 (10.28. 뉴스1)
 - 중국 대변인, 라이칭더 당국에 미국 무기구입에 대한 경고. 중국은 무기 구입에 대한 반발로 전투기와 무인기를 동원, 대만 섬 인근 순찰 실시
- 9.30. 러 외교장관 “북핵 문제 종결된 사안” 언급 (9.30. 뉴스핌)
 - 외교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종결된 사안’ 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 이라고 비판.
- 10.08. 포탄 품질 관리 위해 북한군 러시아 파견 (10.08. YTN)
 - 북한군 탄약의 품질 저하 문제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북한군 파견
 - 북한산 포탄운용 러시아 포병 부상, 탄도미사일 절반 목표지점 도달 불가
- 10.11. 푸틴, 11일 이란 대통령과 회담, “중동정세 논의” (10.08. YTN)
 - 투르크메니스탄 내 국제포럼에서 폐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회담 예정
 - 8일, CIS 국가 정상회의 개최. 9일,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 회담 등
- 10.15. 러시아, 北 무인기 평양 침투설, 북한 입장에 동조 (10.15. 연합뉴스)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북한이 제기한 ‘무인기 평양 침투설’ 에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언급
- 10.22. 러시아, 北 파병설에 첫 반응 (10.15. 조선일보)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북한군 러시아 파병 주장에 모순된 것들이 많다”, “제3국을 겨냥한 것 아니다” 파병에 관한 첫 언급
- 10.22. 신흥경제국 협의체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막 (10.22. 세계일보)
 - 22~24일 러시아 카잔, 독립국가연합(CIS),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비회원국 대표 등 약 40개국 참여
- 10.24. 러 하원,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10.24. 서울신문)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본회의에서 북러 조약 비준안 심의 후, 만장일치 가결. 쌍방에 필요시 군사지원 제공 내용 포함
- 10.25. 푸틴, 북한군 파병 부인 안했다 (10.25. 중앙일보)
 - 푸틴, 브릭스(BRICS) 정상회의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

나. 해외 전문가 논평

■ Darcie Draudt-Véjares(카네기평화재단 한국학 연구위원): “재협상 혹은 물러서기: 트럼프와 해리스의 매우 다른 대북정책” (The National Interest, 10.2)

- 이번 대선에서 한국의 비중은 줄었지만, 두 후보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드러냄. 트럼프는 여전히 동맹국들이 방어 부담을 균등하게 나누길 희망함. 해리스는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의 개정본을 가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둠. 이는 단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환경, 공급망, 기술 등의 영역이 포함되며,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함임.

■ Christian Curriden(랜드연구소 국방 분석관): “쉬운 답이 없다: 좁아진 미국의 대북정책 선택의 폭” (The National Interest, 10.3)

- 미국에게는 북한이 핵보다 원할만한 당근이 없으며, 북한이 두려워할 만한 채찍도 없음. 차기 미 대통령에게는 3가지 옵션이 있음. 첫째, 과거와 같은 전략적 인내의 지속. 둘째, 북핵을 용인하는 대가로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셋째, 전쟁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포기를 압박하는 것. 해리스는 과거로부터의 관성으로 인해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음.

■ Benjamin R. Young(랜드연구소 연구위원): “북러 협력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The National Interest, 10.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뜻밖의 결과 중 하나는 북러협력 강화였음. 이로 인해 북한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받는 경제적 지원으로 김정은은 20×10과 같은 경제정책도 추진할 수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어도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싶어할 것이나 푸틴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음. 러시아는 국제 금융·경제 등 채널로 복귀하기를 원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북 제재와 같은 걸림돌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임

■ Robert A. Manning(스팀슨센터 선임연구위원): “또 다른 한국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Foreign Policy, 10.7)

-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 커짐. 2개의 시나리오 예상 가능.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 이 때 북한이 서해상의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음. 두 번

5. 한반도 정세 동향

째 시나리오는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 미국이 주한·주일 미군을 대만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유지·개선을 포기해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군사적 소통 채널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

■ Alexander Grushko(러시아 외무부 차관): “우크라이나와 NATO의 정보 공유는 러시아와 NATO 간 직접 충돌 위험성 증가시켜” (스푸트니크 통신, 10.9)

- NATO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공급을 늘리고, 군사고문을 파견하거나 작전 수립에 참여하는 등 기밀 정보 공유되고 있음. NATO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이 또한 고려하고 있음. 이 모든 행동은 러시아와 NATO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위험을 높임. 러시아와 NATO 사이에는 ‘하라인’이 있으며, 러시아와 미국은 국방장관 수준의 대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채널은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 찾기보다는 비상사태를 위한 것임.

■ Chad O'Carroll(NK Pro 설립자): “‘두 국가’ 빠진 개헌과 북한의 속내” (NK Pro, 10.9)

- ‘두 국가’ 혹은 ‘통일 포기’ 내용이 새 헌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북한 내부 반발 및 어려움을 의식한 결과이거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북한군은 최고인민회의 직후 도로·철도 차단과 영토 요새화를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겼음. 추후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개헌에 ‘두 국가’ 및 ‘통일 포기’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예상만큼 남북관계에 큰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 Gilbert Rozman(프린스턴대 명예교수): “북·러 동맹의 복원” (The National Interest, 10.9)

- 1년 내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상당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음. 차기 미국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공조와 중국에 대해 형성된 미국 민주당-공화당 간 합의를 절호의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함.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미국 양당 간 합의가 깨지면 대응이 어려워질 것임.

■ Bruce W. Bennett(RAND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확신할 수 없는 북러 밀착” (The National Interest, 10.11)

- 최근의 북러 밀착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조짐은 없으며, 미국의 정보전이 밀착의 와해를 앞당길 수 있음.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북한 무기가 바닥나면,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할 것

이므로, 북러 밀착은 존속하기 어려움. 또한, 장병들의 서방행 탈영을 우려해 정규군 파견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것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시찰단으로 파견된 북한군 일부의 사망이 확인 됐는데, 이들의 사망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거나, 이들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푸대접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음. 따라서, 미국은 북중러 협력을 와해하기 위해 각국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공략해 분열을 유도해야함.

■ **Malcom Davis(호주전략정책연구소 선임분석관): “북러 군사 기술 공유는 악몽” (The National Interest, 10.12)**

- 북러 밀착의 진정한 공포는 북한 군수 물자의 러시아 제공이 아니라, 러시아가 핵·군사·우주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는 것임.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타국에 대한 북한의 억제력과 위협이 증가할 수 있음. 특히, 미국에 대한 제2격 능력의 강화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임. 이들은 각종 국제 조약과 법을 위반할 소지가 충분하며, 그 결과 국제적 고립이 심화할 것임.

■ **Joseph S. Nye(하버드대 명예교수) “아시아판 NATO 불가능” (산케이신문, 10.14)**

- 신임 이시바 총리가 구상하는 아시아판 나토는 이념으로서 좋을지 모르지만, 인도가 참가하지는 않을 것. 일본 주변의 주요국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음. 미국은 아시아판 NATO 구상 자체를 반대하지 않겠지만, 성공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일본에 권할 것임. 한편, 중국의 패권 도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미일 동맹은 더욱 견고해질 것.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미일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

■ **Victor Cha (CSIS 한국석좌) 외: “한반도 긴장 고조 속 풍계리” (CSIS, 10.14)**

- 최근 위성 사진에서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완료됐다는 의미임. 이미 대부분 준비가 완료됐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쉽게 끝나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핵실험 결정에서 실행까지는 대부분의 예상보다 더 짧아질 수 있음. 7차 핵실험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김정은의 정치적 목표를 극대화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Aidan Foster-Carter(영국 리즈대학 명예 선임연구원):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지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 (SCMP, 10.15)**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김씨 정권을 조용히 돕고 자금을 지원해 왔음. 최근 1년간 북한은 포탄과 미사

5. 한반도 정세 동향

일을 지원하는 대가로 정찰 위성 발사에 도움을 받고 필요한 석유를 얻었으나 소련 정보부 장교 출신인 푸틴이 북한을 신뢰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므로 양국 간 더 이상의 협력은 쉽지 않을 것. 지난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후 여태껏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Stephen Costello(퀸시연구소 방문연구위원): “새 북러 조약의 중요성” (The National Interest, 10.15)**

- 북한과 러시아 사이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의 북·러 제재, 미국의 대북 협상 실패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 북·러의 더 깊은 밀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외교 정책의 수정 필요함. 대북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북한 핵 보유(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인정, 한국전쟁 공식 종전, 지역 국가들과 함께하는 긴장 완화 프로세스 가동 등. 이러한 조치들 없이는 북·러 밀착 강화를 방지할 수 없음.

■ **Kayla Orta(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 “민간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이 한반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미국 평화연구소, 10.16)**

-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남북미 협력은 3자 간 신뢰를 쌓고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3국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인 핵·원자력을 다룸으로써 한반도의 안전과 북한 핵에 대한 협의와 합의의 공간을 탐색할 기회가 생길 것. 이러한 접근은 아주 긴밀한 한미 관계를 필요로 함.

■ **Terence Roehring(미 해군사관학교 교수), David Logan(터프츠대학 교수): “북핵 억제 이론의 함의” (38 North, 10.17)**

- 전략적 억제는 잘 유지되고 있으나 하위 단위에서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 즉, 작은 오판, 실수, 무의식적 행동 등으로 인한 확전의 가능성 여전히 있음. 북한의 핵 능력 증대는 이러한 하위 단위에서의 자신감 상승과 대담성으로 이어져 우려되는 것임. 따라서, 한미의 방위 능력 상시 점검, 리스크 및 긴장 감소, 오판, 실수 관련 우려 해소,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회색 지대에서의 전술적 역량 확보 등의 과제가 있음. 전략적 억제력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위기관리에 신경써야 함.

■ **Siegfried Hecker(미들베리연구소 교수):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울 것인가?” (The National Interest, 10.17)**

- 북한이 자력으로도 위협적인 핵 능력을 개발해 냈지만,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 이 부족한 부분들을 러시아가 빠르게 채워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알려줬는지,

알려줄 생각이 있는지는 불투명함. 우려스러운 것은 러시아는 이미 크림반도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임. 즉, 북한에게 핵·미사일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이 NPT와 국제법 위반이지만, 러시아는 그에 구애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John Merrill(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 “김정은의 핵 시설 공개는 미국의 대북정책 재고로 이어져야” (The National Interest, 10.18)

-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므로, 군비 통제와 리스크 감소 등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함. 따라서, 북핵 위협을 없애려하기 보다는, 위협 관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함. 이는 상호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가동시키는 것 외에도,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평화조약도 포함됨.

■ Sydney Seiler(전 북한정보 분석관): “2030년까지의 북핵 시나리오” (CSIS, 10.21)

- 북한의 핵무력 증강과 러시아와의 밀착이 북한 지도부의 무모함을 강화시켜 한국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음. 이는 여태껏 한미가 대북정책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행위들일 것임. 따라서 한미의 정책가들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구축해 대비해야 할 것임.

■ Chad O'Carroll(NK Pro 설립자): “우크라이나에 전투병력을 보낸 북한이 얻는 것” (NK Pro, 10.21)

- 파병으로 북한이 얻는 것: 실전 경험과 러시아로부터의 경제·기술 지원. 파병으로 인한 리스크: 병사들의 외부 세계 노출, 외국 전쟁 개입에 대한 북한 내 반발, 국제 사회의 부정적 반응. 결국, 파병 결정은 전쟁 그 자체와 북한의 대외 관계에 크나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Victor Cha(CSIS 한국석좌): “북한, 루비콘 강을 건너다” (CSIS, 10.23)

-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실패,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식량 등 물자 부족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타개하려는 것임. 또한, 실전경험이 없는 현재의 북한군은 훈련용 연료와 물자조차도 부족한데, 러시아가 제공해주는 자원으로 북한제 무기 성능을 시험해보는 등 실전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북한이 전투병력까지 보냈다는 사실은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 등)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계산이 깔려있음. 한편, 북한이 여태껏 유럽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인식해 일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어왔지만, 이번 파병으로 북한과 유럽 국가들의 사이가 틀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발맞춰 한국과 NATO 국가들의 안보 동맹 강화도 예상됨.

6. IFES 북한 지식 정보

■ 북-러조약

배경 및 연혁

- 북한과 소련은 1961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조소우호조약')을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되었다.
 - 동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동군사개입'을 비롯한 북한과 소련 간의 군사 경제 문화 기술의 원조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1990년 9월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8월 소련이 해체되자 북-러관계는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관계에서 경제적 정치적 관계로 전환되었고, 1996년 '조소우호조약'은 폐기되었다.
- 2000년 2월 9일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 중 북한과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 동 조약은 12개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제2조에서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쟁점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은 삭제하고,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4년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기존에 체결된 조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조약 평가

- 2024년 6월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조약('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북-러는 기존에 체결된 조약, 선언 등을 모두 대체하고 새로운 조약에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키며 정치군사 동맹관계로 양국 관계를 새롭게 재정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조약 제4조는 1961년 체결된 '조소우호조약' 제1조와 유사하다. 또한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병력을 파병하는 것도 새로운 조약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변동사항 (2024. 10. 1.)

- 최영준 초빙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신임 국제협력실장 임명

나. 일본 홋타 유키히로 재단법인 카잔카이 수석연구원, 이관세 연구소장 면담

- 일자/장소: 2024년 10월 19일 (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실
- 내용: 최근의 북-중 관계 현황 등을 논의한 후, 연구소 도서관 북한자료실 견학

다. 일본 나카가와 마사히코 아시아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 연구소 방문

- 일자/장소: 2024년 10월 23일 (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
- 내용: 연구소 도서관을 방문, 일본에 없는 자료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사, 기업사에 관한 자료에 관심을 가지며 북한자료실 견학

라. 도서관 홍보영상(PPT) 제작 (국문/영문/일문/중문)

50년 역사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의 통일·북한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도서관의 역사와 주요 특징 등을 도서관을 방문 이용하는 국내외의 학자들과 정관계 인사, 북한대학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도서관 홍보영상(PPT)을 제작하였다.

동 자료에는 국내 사립도서관 최고의 북한 특수자료 장서 보유와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에 대한 소개 및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의 학술적 네트워크를 안내하고 상세한 도서관 이용 안내 등이 수록되었다.

또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총 4개 국어로 제작되어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기관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972년 연구소를 처음 설립한 뒤 북한 관련 자료 수집에 애를 먹었습니다. 최고의 노력 끝에 현재 우리 도서관은 북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북한연구를 위한 국내외 자료들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지지 않고 북한 자료를 모을 것입니다."

- 박재규 경남대 총장, 인터뷰 중

2. 언론 속의 IFES

가. 『제11차 삼청포럼』 개최 결과 보도 (2024. 10. 08.)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경남신문, 창원일보 등 9개 국내 언론사에서 『제11차 삼청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국제분쟁이 한반도 미치는 영향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포럼”



< 제11차 삼청포럼 개최 >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창원 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에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은 'K-방산 vs. NK-방산: 국제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양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최근 국제적인 갈등 심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하면서 북한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개발, 북한판 '핵 3축' 구축 등이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 언론 속의 IFES

나. 경남대 박재규 총장, 창원KC국제문학상 수상 시인 환영 오찬 개최 보도 (2024. 10. 11.)

경남일보, 경남매일, CNB뉴스, 경남뉴스투데이 등 12개 국내 언론사에서 『경남대 박재규 총장, 창원KC국제문학상 수상 시인 환영 오찬』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 창원KC국제문학상 환영 오찬”



〈 환영오찬 기념촬영 〉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경남일보 황용인 기자)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은 지난 11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2024년 제15회 창원KC국제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시인들과 환영 오찬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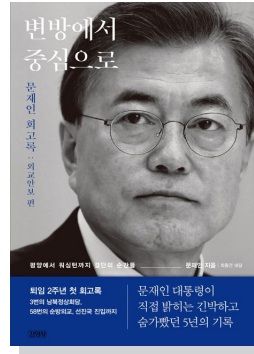
박재규 총장은 “튀르키예 고대 정신문화를 현대문학에 녹이며 다양성과 자연 사랑,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 메틴 투란 시인의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창원KC국제문학상’이 앞으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물론 세계 문학인을 잇는 행복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 매김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3. IFES 도서관

가. 추천도서



제 목: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저 자: 정욱식
 출간일: 2023.7.21.
 출판사: 서해문집
 쪽 수: 248쪽



제 목: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 편
 저 자: 문재인
 출간일: 2024. 5.18.
 출판사: 김영사
 쪽 수: 650쪽

지난 여름 방학 한 달 정도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관해 일본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남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지인 몇 분에게 드릴 책 몇 권을 사서 갔었다. 650페이지에 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평화네트워크 대표이자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인 정욱식의 다소 긴 제목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다. 놀랍게도 250쪽도 되지 않은 정 소장의 저서에 대한 평가가 좋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일본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방해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현재의 불안정한 한반도에 대한 정욱식의 경세 판단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인 듯하다.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으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무를 담당했었던 최종건은 회고록의 대담자로서 이 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어떻게 평화롭고 번영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만들려고 했는지 알려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한 건도 없었고, 군사적 충돌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시기가 딱 노무현 정부와 우리 정부뿐”이라고 자찬한다.

그러나 정욱식이 지적한 대로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를 추구하면서 북한에 핵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하는 ‘이중 잣대’에 분개한 김정은 정권이 입장과 노선을 완전히 틀면서 문재인 정권 후반기의 남북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 정욱식은 화려한 수사와 빈곤한 실적 사이의 ‘희망고문’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2020년 6월 김여정이 발표한 일련의 담화에 잘 드러나 있듯이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 상호존중과 신뢰 훼손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측의 불신과 배신감은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인식하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폭파

3. IFES 도서관

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정책은 비핵화에서 핵무력 강화로 전환되고 전술핵의 개발 결정과 한국에 대한 핵 사용 가능성 시사, 끝내는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 즉 ‘두 개의 조선’을 공식화했다.

정욱식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정욱식이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이야말로 ‘나의 선의를 믿어 달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정욱식에 의하면, 북한은 30년 가까이 매달려온 ‘북미 적대관계의 평화관계로의 전환’에 대한 미련을 접고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적 차원의 대전환을 시도함으로써 2020년대의 북한은 지난 30년간의 북한과는 ‘다른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정욱식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김정은과 트럼프가 주고받은 27통의 친서에 ‘새로운 북한’을 안내하는 단초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임기 말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38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그렇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한 심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남북관계가 두 정상의 의지만으로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나아가 좀 더 과감한 행보를 해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다. 정욱식의 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보다 먼저 출판되었기 때문에 38통의 친서를 남북 정상이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정욱식은 몰랐을 것이다. 2022년 9월 『한미저널』에 공개된 김정은-트럼프의 친서 전문처럼 남북 정상 간의 친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10월 15일 북한은 한국과 연결된 북측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렸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북한 헌법의 요구와 예측 불능의 심각한 안보환경에서 나온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통일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북한 헌법에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위에서 소개한 두 책은 새로운 북한과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해준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나. 10월 도서관 신규 구독회원 가입 현황

통일 북한 전문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10월중 도서관 신규 구독회원으로 9명(평생회원 2, 일반회원 7) 가입하였다.

- 도서관 가입 방법, 회원 혜택, 가입 문의 등은 『IFES 뉴스레터』 안내사항 참조

다. 10월 개방서가 운영 현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도서 나눔을 통해 자료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연구자들이 통일 북한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개방서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기증 269권(누계 320권), 도서나눔 170권(누계 244권)

4. 예정사항

가. 제2차 삼청포럼 개최

- 일자/장소: 2024. 11. 21.(목)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발표자: 박노벽 前주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

나. 중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방문 세미나 (11월 말)

다. Fellowship 사업

- 펠로 수료식 (11.01.) / 펠로 최종 발표회 (11.07.)
- 합동 워크숍 (11.12. ~ 13. 1박2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라. 해외 전문학자 초청 특강 (11.26.)

마. 『IFES 사료실』 개설 (11월 중)

바. 도서관 구조개선 추진 (11월 중)

5.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